

국제법<선택>

2014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B국 의회는 전쟁범죄(war crimes),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집단살해죄(the crime of genocide)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또한 어디에서 그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불문하고 체포, 수사 및 B국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B국의 영장 판사는 A국 내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관련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C국의 외교부장관 X에 대하여 체포 영장을 발부하였고, 또한 인터폴(INTERPOL)에 X를 체포하여 신병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행위와 관련하여, X는 A국과 C국에서 형사 소추된 바가 없다. A국, B국, C국은 모두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며, 모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Statute)의 당사국이 아니다. (총 20점)

- 1) B국의 X에 대한 조치가 국제법상의 ‘외교 특권과 면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 2) X가 위 문제의 행위로 B국 법원에 소추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국제형사재판소에 소추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각각 설명하시오. (15점)

제 2 문. A국 어선 K호는 어족자원이 풍부한 B국의 EEZ에 들어가서 몰래 어로작업을 하다가 B국 해양경찰에 발각되었다. 정선명령을 받았지만 K호는 이를 무시하고 전속력으로 도주하다가 B국 EEZ 내에서 B국 국적의 소형유람선 L호와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L호는 침몰되고, 2명의 B국 선원이 사망하였다. K호는 이 사실도 모르고 인접 C국의 EEZ로 도피하였는데, 결국은 이곳까지 계속 추적한 B국 해양경찰에 의하여 나포되었다. B국은 K호 선장을 ①B국의 EEZ내 어로관리법 위반행위, ②2명의 B국 선원에 대한 과실치사의 죄목으로 자국 법원에 기소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K호 선장은 B국 해양경찰이 외국의 EEZ에서 K호를 나포할 국제법상의 권한이 없으므로 자신은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국과 B국은 모두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의 당사국이다. 이러한 양측 입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 (15점)

제 3 문. A국은 2006년에 범죄인인도에 관한 다자조약을 비준하였다. 동 조약은 2011년 발효하였고, 2014년 현재 당사국의 숫자가 40개국이다. 2014년 범죄인인도를 둘러싸고 A국과 그 인접국인 B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B국은 당해 조약에 서명은 하였으나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A국은 당해 조약의 문제가 되는 조항은 이미 관습국제법이 되었고 따라서 B국에 대하여도 구속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B국은 이러한 A국의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A국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 (15점)

안전행정부 시험출제과장

